

“꽃은 뇌물 아닌 마음의 선물 법이 강하면 백성 살 수 없어”

화훼농가 등 농어민들 김영란법 1년 토론회장서 시위

화훼 농민 등 농어민들이 26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토론회장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30분간 단상에 서서 이들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하려는 순간 ‘김영란법 개정해 농업경제·서민경제 살려내라’, ‘꽃은 뇌물이 아니다. 마음의 선물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농어민 20여 명이 단상 앞으로 달려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권익위원장의 인사말은 필요 없다. 화훼농가, 농어민, 자영업자, 골목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김영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법을 보완하라는 것”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또 “농산물이 언제부터 뇌물이 됐고, 꽃이 뇌물이 됐느냐”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난재배지협회 유창호 수석부회장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100원인데, 그것도 주지 말라고 한다. 하루 20시간씩 일해도 10만 원을 못 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권익위는 법밖에 안 보이고, 국민은 안 보이느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그러면서 권익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진지하게 잘 들었다. 농어

민·화훼농가의 고충을 듣고 법이 과도한 규제의 측면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모였다”며 “고충과 눈물을 진정으로 답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할 말이 더 있으면 발언을 더 해도 좋다”며 ‘경청의 자세’를 취했다.

그러자 유 부회장은 “너무 추상적이다. 수만 번은 들어왔던 말”이라며 “큰 절로 부탁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협박으로 들리면 발을 달게 받겠다”면서 실제로 즉석에서 큰절을 했다.

박 위원장은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법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는 그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다른 농민이 “법이 강하면 백성이 살 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무슨 소용이나”고 외치자 “법학자로서 그 말씀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화훼 농민과 농어민들은 재차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 우리의 현실만은 정확히 알고 그거에 걸맞은 대책을 세워주길 부탁한다”며 단상 앞에서 30분 만에 물러났다. 박 위원장은 “시간이 늦었지만, 토론이 성공적으로 이뤄질지 바란다. 인사말로 몇 가지 말하려 했으나 이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는 짧은 말로 인사말을 끝냈다.

/김형호기자 khh@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사전현담에서 참석자들에게 차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최중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영문 관세청장, 문 대통령, 한승희 국제청장, 문무일 검찰총장, 서훈 국정원장. /연합뉴스

“부패척결 성역 없다”

북 “전략폭격기 격추 가능”·미 “국제공역 타격 안 돼”

‘무력시위’ 북·미 긴장 고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전포고’를 주장하며 미 전략폭격기가 영공을 넘지 않더라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미 본토와 동맹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추가 무력시위의 가능성을 열어놓아 미·북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유엔총회 일정을 마친 리 외무상은 이날 숙소인 뉴욕 밀레니엄힐튼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실사 우리 영공 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어질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권 대응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북, 미국 전략폭격기 비행 때 아무 대응 조치 안해”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지난 23일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했을 당시 북한이 아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장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은 이

러한 리 외무상의 언급은 이를 전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해 동해의 최북단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독자 ‘무력시위’를 펼친 데 대한 강력한 반발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핵심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강화하는 등 추가 무력시위를 펼칠 것으로 예고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성격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특히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라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유엔 헌장은 개별국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타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 방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정당방위 성격의 ‘개별 자위권’을 규정한 유엔 헌장 51조를 거론한 것이다. 이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북한의 군사행동은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 조치임을 안팎에 알려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 정부는 리 외무상의 ‘트럼프 선전포고’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바 없다. 솔직히 말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한 나라가 국제공역에서 다른 나라의 비행기를 향해 타격한다는 것은 결코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 언론은 리 외무상이 자위권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며 ‘차킨게임’ 양상의 미·북 대치가 이어질 경우 벌어질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을 우려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완전 파괴’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후 북한이 가장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며 “세계의 외침이 국가가 자위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공이 아니더라도 미 전략폭격기를 떨어뜨릴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한 북한의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음이 없는 것은 중국·러시아와 상의를 한 것이다.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B-1B 궤적을 공개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비무장지대(DMZ) 관련 조치를 묻는 말에 “북한도 강하게 선(先)보고하고 후(後)조치 하라고 지시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서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위원장이 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농업 예산 증가율 급감 ... 증액 시급

국가예산 7.1% 늘 때 0.1% 상승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비교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농업 포기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을 분모로 하고 ‘농업 예산 증가율’을 분자로 하는 상대 비율은 1.4%로, 박근혜 정부의 38.1%에 비교해 3.7%(2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국가전체 예산은 429조원으로 전년도(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5000억원) 늘었고 농업 예산의 경우 내년도 예산은 19조6418억원으로 전년도(19조6221억원)보다 0.1%(197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 전체 예산이 전년보다 7.1% 늘어날 때, 농업 예산은 0.1% 상승했다

는 것으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과 농업예산 증가율의 상대비율은 1.4%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당시 연평균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은 4.2%였고, 농업예산 증가율은 1.6%로, 상대 비율은 38.1%였다.

‘국가 예산 증가율’과 ‘농업 예산 증가율’의 상대 비율을 역대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75.6% ▲노무현 정부 77.4% ▲이명박 정부 52.5% ▲박근혜 정부 38.1% ▲문재인 정부 1.4%(2018년)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 두 비율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보성 출신 고 백남기 농민은 박근혜 정권의 농업 출대를 규탄하려고 서울에 왔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정책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버림받아 왔다’고 작심비판했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문화 도시 광주는 지금 행복한 독서 중!

질문이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

빛고을 제12회 독서마라톤

2017. 4. 7(금) - 11. 7(화)

대상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광주 시민

구간 거북이 / 악어 / 토끼 / 타조 / 사자 / 호랑이 / 월계관

신청 <http://bookmarathon.gen.go.kr/>

주최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